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김 종 식 완도군수

‘해양 테크노폴리스’ 중심지로 육성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해양생물·해양관광·해양에너지·해양물류가 함께 어우러진 ‘해양 테크노폴리스’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완도는 지역 곳곳에 활력이 넘쳐나고 전국이 주목하는 명성에 걸맞게 건강 휴양도시, 환경도시, 사람이 모여드는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에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새해포부를 밝혔다.

전북·해조류 연구소 설립

이를 위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군정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손꼽았다.

김 군수는 완도개발공사를 통해 투자유치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건설한 기업들을 유치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북연구소와 해조류 연구소를 설립하여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해양생물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해양생물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전략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방침이다.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파, 구절초, 약산 생약초 단지 등



비교우위에 있는 특화작목과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고 스포츠산업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사계절 전지훈련 유치 및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 군수는 미래 지역발전의 과제로 인재육성과 차질없는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도 강조하고 나섰다.

(재)장보고장학회 장학사업을 활성화해 지역교육의 경쟁력 향상과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이를 위해 현재 모금된 98억원의 장학기금을 오는 2016년까지 150억원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는 이미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귀농·귀여지원, 행복마을 조성, 다문화가족지원 등 다양한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 군수는 “어려운 재정형편에

도 불구하고 복지에산을 금년도 전체 예산의 17%로 확대했다”면서 “다함께 잘 사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의 섬 완도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가고 싶은 섬’ 슬로시티 청산도를 체류형 휴양지로 개발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는 체험형 테마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생각이다.

청산도 체류형 관광개발

이와 함께 디지털시대 융복합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미디어 영상산업을 행정과 접목시키는 차별화 전략을 통해 완도의 가치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 군수는 지역경제의 동맥역할을 할 수 있는 완도~남장간 4차선 확·포장 공사의 조기개통과 고교~신지, 노화~소안 연도교 건설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굵직한 현안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비판과 편견보다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구성원들의 결집력과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전남 서부권

서해 中어선 불법조업 극성

무허가·영해 침범 등 지난해 134척

서해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어로 행위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목포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불법조업 혐의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지난 2009년 122척에서 지난해 134척으로 전년 대비 12척이 늘었다.

지난해 적발된 중국어선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허가 조업 44척 ▲제한조건 64척 ▲영해침범 26척이다. 이중 영해침범은 전년(8척) 대비 220%나 증가한 것으로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조직화되고 대범화돼 우리 영해내 해상자원을 위협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불법조업 증가요인으로 중국어장은 황폐화된 반면 우리 영해내는 풍부한 어장이 형성돼 서해 EEZ내 조업 허가받은 중국어선 외에 무허가, 영해침범 어선까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화되고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행위 단속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어족자원 보호와 우리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영해침범 단속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목포신항 물동량 4배 급증

지난해 3만TEU “물류메카 도약”

지난 2004년 개항한 목포신항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목포신항을 이용한 컨테이너 화물량은 3만TEU로 2009년 8000TEU에 비해 거의 4배가량 늘었다.

시는 목포신항의 물동량 증가 원인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등 2개 항로와 일본, 중국항로 등 현재 운항중인 5개의 국제 컨테이너항로 운항을 꼽았다.

또한 목포시와 유관기관의 항로개설 설명회 개최를 비롯해 광주·전남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화물유치 활동과 목포시가 목포항 이용시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 등도 큰 몫을 했다.

목포신항은 지난 2004년 11월 4선

석 준공·개장 이래 자동차, 컨테이너 등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12년 목포대교가 완공되면 신항 배후부지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비한 관계기관·단체가 참여하여 공동마케팅 전개와 함께 항만배후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물류와 항로개설을 통한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가 관건”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국내외 포트세일을 통해 물류비 절감효과,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알리는 등 시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영광군의회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영광군의 각종 위원회가 대폭 정비된다. 영광군의회(의장 이종윤)는 지난해말 열린 임시회에서 군소속 각종 위원회의 난립방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김양모 의원이 발의한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제정된 조례는 ▲

동일위원 2회 초과 위촉금지 ▲위촉직 위원 30% 이상 여성 선발 ▲위원회 참여회람자 공모 ▲위원회 개최결과 7일 이내 인터넷 공개 ▲연 1회 운영실적 평가 등 위원회의 중립예방과 전문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記者 金 容 一

새해벽두에 목포지역에 30cm 가까운 눈이 내린 후 목포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는 제설작업 지연에 따른 항의성 글이 연일 쇄도하고 있다.

한 시민은 ‘목포시는 무주 리조트요, 도로를 요철에 차들이 춤을 추는 카바레’라고 비꼬았다. ‘설

집 앞 눈 쓸기’ 조례가 아니더라도 자기 집 앞 눈은 스스로 치우는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민·관이 힘을 합치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목포시의 상황 대처 능력이다. 눈이 내리면 제설작업은 모두

폭설, 재해 개념으로 대처해야

마, 설마 하다가 설마(雪魔)가 사람 잡았다’는 촌극도 빚어졌다.

이처럼 시민들의 비난 글이 쇄도하자 목포시는 뒤늦게 실·국·소·과·동의 전직원 동원령을 내렸다. 지난 4일 포를 일정량 이상의 폭레인 등 중장비 20여 대가 동원돼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얼음장 걸어내기 작업이 실시됐다. 이로 인해 주택가 이면도로를 제외하고는 도로여건이 상당히 개선됐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늑장 대응도 문제지만 목포시민들의 시민의식 실종도 되짚어 봐야 한다. 무작정 목포시의 제설 소집단 기다리는 것은 안이한 처사다. ‘내



임 영 춘

〈서부취재본부 기자〉

건설과 소관 업무로만 간주한다. 건설과 직원들이 밤잠 안자고 제설작업을 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 건설과 인원과 장비로 목포시 전역을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정량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경우 건설

과가 아닌 목포시 차원의 재해개념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일정 기준치 이상의 폭설이 내리면 재해로 규정하고 목포시 차원의 제설작업이 전개돼야 한다. ‘사후 약방문’의 우(愚)를 또 다시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lyc@kwangju.co.kr

전 북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김 생 기 정읍시장

기업유치 총력전·장학사업 확대

“올해 정읍의 ‘채도와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습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본격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7대 핵심정책 과제를 선정, 시민과 함께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새해 정읍시 7대 핵심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의 중심지 ▲튼 버는 농업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지역공동체 ▲전통과 테마가 어우러진 명품 정읍만들기 ▲조화롭고 활력 있는 매력적인 도시 ▲자연친화적 생태·녹색도시이다.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우선 정읍시는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하고 태인오봉농공단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업유치 TF팀을 구성,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읍 방사선 과학연구소 등 3대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방사선기기 연구기관 확충사업 등 R&D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천문우주 과학연구 등을 조성해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구상이다.

제1시장 주차타워와 다목적 문화광장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교류의 장’ 운영과 테마



가 있는 전통시장 연중 문화행사를 통해 침체된 구도심과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김 시장은 “튼 버는 농업으로, 농민이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며 “광역 친환경 농축산업단지 조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향토음식 개발,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등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절초 축제와 정읍 자생차산업 육성 등 도시민들의 체험관광을 적극 유도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CB)’ 사업을 도입, 농업의 소득을 창출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지역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김 시장은 “정읍에 살고 있다는 자책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하다는 마음이 들도록 차별화된 복지행정

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할머니 전용 복지관 건립,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등과 여성사회참여 확대, 결혼이주여성 진정부도 맺어주기 사업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김 시장은 ‘교육이 미래’는 신념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와 친환경쌀 무상급식 지원,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다자녀가정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 나간다.

내장산 휴(休)밸리 조성

이밖에도 ‘전통과 테마가 어우러진 명품 정읍’을 만들기 위해 ‘내장산 휴(休)밸리 리조트’ 기반조성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국내외 유수기업이 참여하는 민자유치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현존 최고의 가요인 ‘정읍사’ 발원지인 백제 정촌현 복원을 통해 특색있는 관광도시로서 명성에 걸맞도록 추진, 정읍의 관광상품성을 한단계 높여 나가게 된다.

김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소통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부패 없는 행정실현을 선서 합니다”

남원시청 공무원들은 지난 3일 새해 첫 업무로 청렴서약 결의대회를 가졌다. 윤승호 시장과 전 직원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시민감동시대,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실현’을 목표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자고 다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부안 ‘행안 농공단지’ 특혜 의혹

郡, 환경유발 담 가공업체에 78%부지 할값에 내줘

부안군이 행안 제2농공단지 부지분양 과정에서 환경유발 업종인 담도계장이 포함된 특정업체에 부지를 할값에 분양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안군은 행안면 역리 123-1번지에 사업비 286억1700만원을 들여 지난 2008년 3월부터 오는 9월 준공목표로 34만5491㎡규모의 ‘행안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농공단지 분양면적(25만6530㎡)의 78%에 해당하는 20만252㎡를 대규모 도계장이 포함된 담 가공업체인 C사에 공단 조성가의 40%에 분양, 90여억원의 땅값을 깎

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군은 지난해 4월 단체장 선출을 앞두고 C사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500여명의 직접고용과 1500여명의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했다는 홍보를 해왔다. 농공단지 인근 주민 박모(48)씨는 “담 도계를 위해 출입하는 운반차에서 날리는 담털과 도계장의 역겨운 냄새를 어떻게 감당하란 말이나”며 “주민을 기만하면서 특정업체에 부지의 대부분을 할값에 분양한 의도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C사 관계자는 “도계장 시설은 네덜란드식 선진국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유해환경을 없앨 것이다”고 밝혔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군과 C사간 MOU 체결은 전북도가 영광군에서 C사에 땅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을 알고 서두른 것이지만 부안군이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북도 투자유치과 노홍석 기획정책관은 “C사를 추천한 것은 전북도지만, 전북도에서는 MOU를 서두른 것은 없다”며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부안군과 C사가 MOU를 서두른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영광군 문제권 투자유치 담당은 “영광의 어떤 산업단지도 땅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없다”며 “더구나 도계장은 기본적으로 농공단지에는 입주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익산 돌숯공원 6월 준공

침체된 익산 석재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합열 소도용 육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합열을 와리산 78-2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돌숯공원이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시설결정 승인에 따라 본격적인 보상과 사업시행이 이뤄질 계획이다.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돌숯공원은 3만4750㎡규모로 산책로와 광장, 돌조각 전시대 등이 조성된다.

특히 합열 스포츠센터, 합열 근린공원 등과 연계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순창은 귀농 천국”

郡, 교육 등 지원조례 제정

순창군은 올해를 ‘귀농인 유치기반을 뿌리내리는 원년’으로 삼고 귀농인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군은 도내 최초로 지난 2007년 10월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귀농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군은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의 도시민 유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시민 유치관련 소프트웨어사업 등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

군은 귀농조례에 따라 올해 ▲빈집수리비 최대 500만원 ▲이사비 100만원 ▲소독사업비 최대 50% ▲현장실습비 1인 1개월 기준 96만원 ▲귀농학교 수강료 1인 1개월 기준 30만원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시민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비롯해 ▲농업인 교육 우선참여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구입 앞선등 30여 건의 사업도 펼친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